

“군산조선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민주 이원택 의원, “재가동 문제 기업 경영 판단에 맡겨둘 사안 아나 기업 자산인 동시에 전북 제조업·국가 조선산업 생태계의 한 축”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0일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입장문을 내었다. 이 의원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군산조선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기업 경영 판단’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며 “군산조선소는 기업 자산인 동시에 전북 제조업과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태계의 한 축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년째 방치된 군산조선소를 두고 정치가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정치는 어렵고 힘들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정

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조선 정책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와 ‘복수선·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 등은 모두 정부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영역이다 “는 점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산조선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우선이 군산조선소 그대로의 재가동이며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각 역시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맥을 같이 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자로 나서 인수 조건을 설계하고 공공물량과 정책 금융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조선산업 전략 속에서 군산조선소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서도록 끝까지 묻고 제안하고 책임을 요구하겠다”며 “기대를 부풀리기보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자치도 합동 간부회의 3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장, 출현기평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6년 주요업무 및 추진목표 등 합동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민주, 오늘 전buk서 현장최고위원회

지역 민생 현안 점검·전북발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연말을 맞아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당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개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20분에는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정오 12시, 최고위원단은 남부시장 내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진 뒤 전주역을 통해 서울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중앙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이혜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부총장, 권현영 조직부총장, 이지은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정읍·고창)을 비롯해 이성운(전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송태규(익산), 한병도(익산),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지역위원장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전북의 민생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전북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O만호기자

전북도 국장급 전보인사



- 〈정책기획관〉 김철태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 〈복지여성보건의국장〉 방상윤
- 〈환경신림국장〉 이순택
-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 〈특별자치교육국장〉 문성철
-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 〈김제 부시장〉 이현서
- 〈완주 부군수〉 이종훈
- 〈진안 부군수〉 이경영
- 〈무주 부군수〉 노창환
- 〈임실 부군수〉 박현숙

시·군 부단체장

전북자치도, 내년 상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 단행 | 국장급 전보 11명·과장급 전보 46명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26년 1월 2일자로 2026년 상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도정의 핵심 과제 추진과 조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청내 국장급 11명과 과장급 46명 시군 부단체장 5명, 도의회 사무처 진출 1명의 대규모 전보 및 승진 인사이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도청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정책기획관에 김철태 대변인이 내정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신원식 복지여성보건의국장에는 방상윤, 환경신림국장에는 이순택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건설교

통국장에는 최정일, 미래첨단산업국장에는 양선화,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에는 문성철 인재개발원장에는 박동우 국장이 전보됐다.

특히 이번 국장급 명단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파견(총무과)을 떠나는 정광모·한순욱·이지형 국장도 포함되어 인사의 폭을 넓혔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보직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과장급 인사 명단 14명)

도의 홍보를 총괄하는 대변인에는 이철규, 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과 장에는 김재전 과장이 발탁됐다.

또한 장운경 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북도로 파견돼 1월 5일자로 총괄지원과장에 내정됐다.

외부 파견 명단에는 중앙부처 파견한경우, 새만금개발청 파견 최기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파견 유영열, 국회사무처 파견으로 서창순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교육 파견을 떠나는 과장은 엄현미·이상욱·성이순·윤효선·김주영·채서경 과장이다.

지역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김제 부시장에 이현서 국장, 완주 부

군수에 이종훈 국장, 진안 부군수에 이경영 국장, 무주 부군수에 노창환 국장, 임실 부군수에는 박현숙 국장이 각각 내정돼 현장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도의회 사무처로 진출해 사무처장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김관영 도지사를 정점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새해에 추진할 핵심 정책들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O만호기자

도, 국힘과 정책간담회... 현안 논의

올림픽 유치·첨단전략산업기지·RE100 산단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김중훈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도가 역할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다뤄졌다.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설명하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치안 인력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준비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글로벌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실증 거점으로 키우



기 위해 새만금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RE100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만금 RE100 선도산업단지 지정과,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새만금 33센터 정문대로 자리를 옮겨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추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O만호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혁신당 도당, “이재명 정부 실용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것”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단(임형택·이화숙·채민석 등 4명)은 3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국가 재정을 총괄할 핵심 자리에 부적절한 인사를 앉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단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지명 철회 요구가 최근 조국 당대표와 지도부의 전북 방문에서 제기된 ‘지역 발전 경쟁력 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을 지지해왔지만,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중앙정치에 대한 경고”라며 “국가 예산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전북 출신 장관들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처지를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질문은 곧 동조”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의 명예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전북을 존중하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할 바 있다. /O만호기자

또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당은 “제2 혁신도시 조성, 새만금 개발, 농촌 소멸 위기 등 전북의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북 비하 논란이 제기된 인사를 예산 권한의 핵심 자리에 앉히는 문제를 민주당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표로 권력을 얻고 장관직을 맡아온 인사들이 도민의 명예가 걸린 사안 앞에서 침묵한다면, 이는 전북을 ‘뒷받침’으로만 여기는 이중

의 중심에 있었던 정당의 핵심 인사가 전북의 예산과 현안을 총괄 조정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량 증설 결사반대”

김제시의회, 범시민대책위·김제시농민회 등과 성명 발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30일 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김제시 농민회와 함께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량 증설을 허용한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12월 17일 법원은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18만 톤)보다 6배 증가한 111만 톤으로 증설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주상현 의원은 “법원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업체가 청길 1,800억 원의 이익을 평생 흠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목숨보다 우선시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는 김제의 비옥한 땅을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 대응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그는 “상대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치는 동안 전북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대응을 맡겨 11년을 버텨온 주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안전의 최후 보루인 에어독 설치 문제를 나중에 따지라며 매립 용량부터 늘려준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백현 의장은 “김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고향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폐기물 매립량 증설 계획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